



제 목 : 가상자산 관련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

1 개요

-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,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(정무위 대안)이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.
-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,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율 주요 경과 >

- 가상자산 관련 금융부문 대책 발표('18.1.23.)
 -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* 제정
 - * 「FIU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」
 - 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연장 (1차 '18.6.27, 2차 '19.6.26)
- FATF 국제기준 채택('18.10월*) 및 G20('18.11월)·FATF('18.10월 등) 등 국제기구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촉구
 - * 주석서는 '19.6월 채택
- **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복수의 법안이 발의***되었고,
 - * '18.3월 제윤경의원 대표발의안, '18.12월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안, '19.3월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안, '19.6월 김수민의원 대표발의안
 - '19.11.25.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정무위에서 의결

□ 향후 법제사법위원회·본회의 의결 (일정 미정) 및 공포 절차 진행가 진행됩니다.

○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*될 예정입니다.

*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'시행일로부터 6개월내' 신고(경과규정)

□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하위 법규 (시행령, 고시 등) 마련 및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
○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 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,

○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,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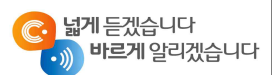
<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>

- ❶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'가상자산 사업자'의 범위(안 제2조제1호하목)
- ❷ 법 적용 대상 '가상자산'의 범위(안 제2조제3호라목)
- ❸ 신고사항, 변경·재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(안 제7조제1항부터 제6항)
- ❹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제7항)
- ❺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(안 제7조제8항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참 고

개정안 주요내용

※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①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, ②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

- **(사업자의 의무)** ① FIU에 대한 신고의무*,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(고객확인, 의심거래보고 등), ③추가적인 의무(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) 부과

* 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요건을 설정 [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,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(ISMS), 대표자가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]

- 미신고 영업시 형사처벌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
- **(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)** ①고객인 사업자의 기본사항 확인(대표자, 거래목적 등), ②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하고,

- ③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 (종료)

- **(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 특례)** 규범의 적응력, 준비기간 등을 감안 ① 시행 시기를 공포후 1년*으로 규정

*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(통상 6개월 소요) 등 감안

- ② 기존 사업자의 신고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* 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서 규정

* 신고는 법 시행후부터 가능하고, 신고제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필요

- **(감독 및 검사 등)** 감독은 FIU원장이 수행하며, 검사는 금감원에 위탁 가능